



[경제종합] 특금법 신고기한 코앞 중소형 거래소 추가여부 촉각 03



Economy

코스피	3148.83 (+20.97)	코스닥	1037.74 (+11.40)
금리 (미국 3년)	1.554 (+0.029)	환율 (원/달러)	1170.80 (-5.20) (14일)

대기업 계열사 정리 '발등의 불'... 성장동력 단절 불가피

재계가 또다른 팬데믹으로 신음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와 ESG 의무화, 플랫폼 규제 등 기업 규제다. 어렵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모처럼 미래 경쟁력 확보를 본격화했지만, 고강도 규제에 가로 막혀 또다시 생존을 우려해야할 처지가 됐다. 메트로신문은 3편에 걸친 '규제 팬데믹' 시리즈를 통해 주요 규제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규제 팬데믹 (上)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 주요 개정안 행정예고 年 1회 공익법인 내부거래 공시 총수일가 지분 30%→20% 하향

계열사 10개 이상 지분정리 위기 투자·상생 등 시너지 위축 우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일감 몰아주기' 공포가 또다시 재계를 뒤덮고 있다. 올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한 규제 강화가 예정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계는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를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 육성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규제가 자의적이라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일부터 23일까지 4개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에 돌입했다.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

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그리고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추가 등이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안이다. 매년 1회 공익법인과 내부거래 현황 공시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상장 계열사 기준을 총수일가 지분 30%에서 20%로 하향하는 내용이다.

이에 해당하는 계열사는 600여개, 삼성뿐 아니라 현대차, SK 등 주요 대기업들도 10개 이상 계열사 지분을 정리해야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렵게 극복해냈지만, 6개월 이내에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철폐를 맞아야 한다는 얘기가.

재계는 현실적으로 이같은 조치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불과 6개월 안에 계열사 지분을 축소하거나 아예 매각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 자칫 선부른 지배구조 개편을 하다가 외국 자본에 경영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현대차는 일찌감치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했다가, 경영권 공격을 받은 후 잠정 중단한 상태다.

경영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들간 시너지 효과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전략적으로 육성하던 기업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어서다.

미래 먹거리 투자와 상생까지도 어려워진다. 재계는 최근 스타트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지분 20%를 넘기면 대기업 집단으로 편입해야하는 문제로 적극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당장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아쉬움이 크다는 후문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7일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거시적·전략적 관점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제도들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손 회장은 일감몰아주기 등 규제가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생존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 나누는 김부겸 총리와 이재용 부회장

김부겸 국무총리(왼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멀티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교육 현장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손진영 기자 son@

그럼에도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적발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계열을 분리한 친족 계열사와 새로 설립한 회사에까지도 3년간 점검하겠다는 친족분리제도도 강화했다.

특히 삼성웰스토리 제재는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를 남용할 수 있는 사례로, 재계에 공포감을 증폭시켰다. 삼성웰스토리가 삼성물산 지분 100% 자회사인데도 계열사들에 2349억원에 달하

는 과징금 폭탄을 부과한 것. 공정위는 모회사인 삼성물산 이익을 극대화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부당한 배당을 쫓겨왔다고 보고 있지만, 삼성물산영업이익에서 웰스토리 비중은 평균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후 현대 그린푸드와 SK 후니드 등 총수와 사촌이나 오촌관계 급식회사들까지 일감 몰아주기의 의혹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카카오, 결국 백기... 골목상권 사업 접는다 쌍용차, 에디슨 vs SM '2파전' 예고

스마트호출·꽃 배달 사업 철수 상생기금 5년 간 3000억 조성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가 관련 사업을 철수하고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카카오는 14일 호출료 인상 논란에 휩싸였던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고 꽃 배달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상생기금도 5년간 3000억원 조성할 계획이다.

◆카카오, 골목상권 진출로 못매

앞서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비판 여론과 정부·정치권의 플랫폼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에 카카오가 소상공인

과의 상생 방안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미용실, 네일숍, 영어교육, 스크린골프 등 골목상권으로 꼽히는 영역부터 결제·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택시·대리운전 호출 등 모빌리티까지 전방위로 영역을 넓혀왔다. 이에 과거 대기업처럼 골목상권 침해와 문어발적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관련된 지적이 계속되자 카카오가 전체 회의를 열고 대응 마련에 나선 것이다.

카카오는 앞으로 IT혁신과 이용자들의 후생을 더할 수 있는 영역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며, 골목상권 논란 사업 등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

서는 계열사 정리 및 철수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 인재 양성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한다. 더불어 콘텐츠와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카카오T, 논란 사업 철수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의 카카오T 택시가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통합하고, 택시 기사와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고 ▲택시 기사 대상 프로그램비 지급을 월 3만9000원으로 인한다.

<6면에 계속>

/강준혁 기자 junhyuk@

인수전 윤곽... 본입찰 오늘 마감

쌍용자동차 매각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사실상 에디슨모터스와 SM그룹의 2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래차를 위한 비전에 따라 최종 승자가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15일 매각 중간사와 본입찰 접수를 마감한다. 이후 1달여간 평가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최종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인수 뜻을 내비친 업체는 국내외 11개로 알려졌다. 이미 일부업체는 지난 27일까지 예비실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최종 본입찰 참여 업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매각 작업에서도 인

수 금액을 둘러싸고 눈치 싸움을 벌이는 만큼, 이번에도 대부분이 마감 당일인 15일에서야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에디슨모터스와 SM그룹을 유력한 인수 후보로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자금력과 사업 계획을 고려한 결과다.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가격과 회사 운영 방침을 가장 중요하게 보겠다는 방침이다. 입찰가가 높고, 추후 쌍용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가.

자금력으로 보면 SM그룹이 다소 우세하다. 다만 사업 비전으로 보면 에디슨모터스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김재용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與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30만~40만명 예상... 90%까지 지급될 듯”
▲ 이낙연 “미혼 한부모·청소년 부모에 임신·출산·양육 지원 확대” /사진 뉴시스

▲ 김두관 “정세균의 총청권 제2수도권 공약 이어받겠다”
▲ 윤석열 측 “조성은·박지원 동석자, 특정 선거캠프” 고발장 적시



▲ 홍준표, 윤석열 또 저격 “역공작 하나... 잘못 배운 정치 행태” /사진 뉴시스
▲ 이정미 “제주 제2공항 건립 막고 친환경 도시재생 실현”